

## ‘제로성장’하에서도 바람직한 사회는 가능할까?

여인만

### 1. ‘잃어버린 20년’에서 잃어버린 것은 과연 무엇인가?

제4호(2011년) 특집 「‘잃어버린 20년’과 일본인의 ‘생활」 이후, 5년 만에 경제 부문을 다시 특집으로 다루게 되었다. 그 사이 일본경제의 위상은 1990년대 이전으로 회복되기는커녕 점점 더 하락하고 있다. 일본의 GDP는 1997년에 536조 엔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경향적으로 하락하여 2011년에 460조 엔까지 떨어졌고, 그 이후 약간 증가하여 2015년에는 500조 엔이 되었는데 이는 1995년 수준과 같다. 그 사이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 규모가 확대되어, 1990년대 중반에 17.9%이던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던 일본의 비중은 2010년 5.7%로 급감했고, 2030년에는 4%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2012년 말에 등장한 아베 정권은 2013년부터 ‘아베노믹스’라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않다. ‘잃어버린 20년’은 ‘잃어버린 25년’이 되었다. 그리하여 실제로 5년 전 특집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격차의 확대, 비정규직 문제는 그동안 더욱 심각해지고, 청년층의 고용 및 삶의 방식에 대해 프리터, 니트, 패러사이트 외에 더해 프레카리아트(precariat), 위킹 푸어, 사토리 세대 등의 신조어도 나타났다.

그런데 ‘잃어버린 20년’ 동안 과연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엇을 위해 써야 할 시간을 헛되이 했다는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성장’이라고 답할 것이다. 1990년대 이전까지 당연하게 생각 해온, 지난해보다 올해의 경제 규모가 더 커진다는 의미의 경제성장이 실현 되지 않는 기간이야말로 사회가 진보하지 않는 멈춘 시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배후에는 빈곤과 격차, 고용 불안, 청년층의 무기력, 나아가 정권의 보수화·우경화 등의 문제가 경제성장에 의해 해결·해소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는 두 가지 반론이 가능하다. 첫째는, 제로성장이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일본경제의 조건·상황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즉 1955년부터 시작되어 짧게는 1973년까지, 길게는 1990년까지 지속된 일본경제의 ‘성장단계’를 뒷받침한 조건이 종식되었기 때문에 더는 성장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인구구조, 산업구조 등의 영향으로 최근 20여 년간 일본경제의 저성장이 나타난 것이고, 나아가 이 현상은 일본에만 특수한 것이 아니라 선진국 일반에 공통된다.<sup>1</sup> 이는 장기적인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1930~1980년대가 예외적으로 격차가 축소되던 시기였다는 피케티(Thomas Piketty)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고,<sup>2</sup>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일본화’하고 있는 현상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고든(Robert Gordon)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가 197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 생산성 증가는 현저히 낮아졌고 IT 혁명도 이 추세를 바꾸지는 못했기 때문에 생활수준이 향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sup>3</sup>

물론 이러한 주장은 아직까지 경제학자들 간에 주류의 입장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 성립 이래 이러한 맬더스적인 비관주의가 주류를 형성한 적이 없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일본의 경우 서구제국 특히 미국과의

1 이러한 주장의 대표적인 예로는 水野和夫, 『100年デフレ』, 日本経済新聞社, 2003; 『資本主義の終焉と歴史の危機』, 集英社, 2014를 들 수 있다.

2 토마 피케티 저, 장경덕 외 옮김, 『21세기 자본』, 글항아리, 2014.

3 마르크 시어리츠, 「경제학자 3인의 위기탈출 ‘레시퍼’」, 『Economy Insight』 73호, 한겨레신문사, 2016.5.

제도적 차이에 기인하는 비효율성이 충분히 가능한 성장을 현실화시키지 못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일본식의 체로성장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러한 ‘실용서’가 재계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광범하게 수용되고 있다.<sup>4</sup>

두 번째 반론은 경제성장이 실현되지 않으면, 빈곤과 격차, 고용 불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가, 혹은 경제성장과 경제문제의 해결은 인과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사실 이 비판은, 첫 번째 비판이 비판주의라는 데 대한 적극적 반론에 해당한다. 즉 경제성장이 대부분의 경제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경제성장론자들의 주장은, 경제성장이 실현되지 않으면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성장이 계속되던 시기에도 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주장이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질적인 의미로서의 경제발전이 양적인 의미로서의 경제성장과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은 예전부터 있었고, 행복·만족도와 소득의 관계가 일정 시점을 지나면 비례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줄곧 제기되었다.<sup>5</sup> 그러나 최근의 주장은 이러한 ‘규범적’인 비판이 아니라, 현실 상황에 입각한 비판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즉 저성장기이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았던 고이즈미 정권 시절과 최근의 아베 정권기에 실질임금은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격차만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경제성장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대된 것이다.

그리하여 프랑스의 ‘탈성장·반성장주의자’인 라투슈(Serge Latouche)의 저작이 일본에서 유행하고,<sup>6</sup> 그와 유사한 주장이 확산되었다. 예를 들어, 러

4 김현철, 『저성장시대 기적의 생존전략』, 다산북스, 2015.

5 최근 일본과 한국에 소개된 이러한 주장으로는, Derik Bok, 추홍희 옮김, 『행복국가를 정치하라』, 지안출판사, 2011; Bruni & Porta, 강태훈 옮김, 『행복의 역설: 행복의 정치경제학』, 경문사, 2015가 있다.

6 中野佳裕 訳, 『脱成長』は、世界を変えられるか: 贈与・幸福・自律の新たな社会へ, 作品社, 2013; 『経済成長なき社会発展は可能か? 「脱成長」と「ポスト開発」の経済学』, 作品社, 2010.

미스는 경제발전으로 빈곤은 해소되지 않으며, “제로성장을 환영한다”고 과감하게 지적하고, 그 대신 ‘대항발전’을 주장한다.<sup>7</sup> 그리고 최근에는 이상의 비판을 종합하여 현재의 일본의 상태를 ‘정상상태’(定常状態)로 규정하면서 일본경제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비판도 나타났다.<sup>8</sup>

이상과 같은 반론의 입장에서 보면, 최근 20년간 잃어버린 것은 성장의 기회가 아니라, 일본경제가 새로운 시대·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인식과 그에 적합한 진로의 모색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성장이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보장이 없고, 반대로 제로성장에서도 바람직한 경제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따를 경우, 일본경제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즉 성장의 정체, 장기불황에 의해 빈곤 문제가 어떻게 심화되고 사회적 약자의 입장이 얼마나 악화되며, 정치적 우경화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느냐를 분석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한 분석은 암묵적으로 경제성장이 그 문제를 해결 혹은 완화시켜줄 것이라는 입장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의 현상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성장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색이야말로 경제적 상황이 정치사회구조와 의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경제결정론’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 2. 제로성장기 일본 경제와 사회의 문제점 및 대안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번 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의도를 가지고 기획되었다. 먼저 1990년 이후의 일본경제의 저성장 과정의 원인을 일본만의 일국적 요인이 아니라 세계사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그 의미를 재조명한

7 다グラス·라ミス, 『經濟成長がなければ私たちは豊かになれないのだろうか』, 平凡社, 2000(김종철·최성현 옮김,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녹색평론사, 2002).

8 하ーマン·데일러/枝廣淳子, 『「定常經濟」は可能だ!』, 岩波ブックレット, 2014; 武田晴人, 『脱・成長神話』, 朝日新書, 2014.

다. 둘째, 장기적인 저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혹은 저성장에 의해 심화된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해결방법으로서 성장력 회복을 대신하는 대안을 모색한다. 셋째, 1990년대 이후 사회·문화·일상생활 등의 각 분야에서 그 이전 시기와 변화된 양상을 포착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재조명한다. 넷째, 경제학·경제사뿐만 아니라 정치학, 사회학, 문학 등 학제 간 연구 성과를 포괄한다.

이러한 의도하에서 각 분야의 권위자 및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여섯 편의 논문을 의뢰했다. 그 가운데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의 논문이 네 편으로 다른 특집호보다 많게 된 것은 각 분야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줄 수 있는 필자를 우선한 결과다. 이하 각 논문의 내용 및 의미를 소개하도록 한다.

다케다의 「성장신화로부터의 탈출: 제로성장기 일본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은 경제성장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된 과정을 소개하면서, 그것이 이미 효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문제에 대한 처방전으로 쓰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최근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등의 성장회복 정책은 성장은커녕 부작용만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의 한계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환경 문제와 자원제약을 고려할 때 최소한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의 성장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 그 대신 제로성장하에서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노동생산성 향상은 계속 추구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을 위한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시간의 증가로 돌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로 인해 성장률이 높아지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행복·만족도는 상승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로 앞으로 일본을 젊어질 젊은이들이 태어나 자란 시대를 부정적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일본의 미래는 현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데, 성숙사

회, 즉 제로성장사회에서도 개성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삶의 방식을 존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과 같은 주장은 편집자의 문제의식과 일치하고, 사실 편집자는 다케다의 저서에 크게 공감한 바 있다. 특히 저자는 각자에게 삶과 노동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여성들에게 사회적인 노동과 가사·육아를 양립하라는 것은 남성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양자택일과 양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뒤에서 소개하는 다케노부의 논문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참신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시이의 「거품경제와 장기불황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은 ‘잃어버린 20년’의 원인을 정치경제학적으로 규명한다. 여기서 정치경제학적이란, 정치와 경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입장으로,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개입에 의한 영향을 의미한다. 즉 거품경제는 미국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이 금리 인상을 연기한 것이 주된 원인이며, 장기불황의 시초가 된 금융권의 신용경색에는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이 일본의 은행을 견제하기 위한 BIS 규제の影響이 컸다. 또한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의 하나로 추진된 우체국 민영화 등의 경제정책은 미국 업계의 이익을 반영한 미국 정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장기불황이 계속되는 데는 일본 국내의 책임도 적지 않은데, 구체적으로는 ‘일본적 경영’의 장점인 장기고용의 포기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다. 거기에는 기업과 노조 모두에 책임이 있다. 또한 엘피다와 소니의 사례를 통해 일본의 기업 경영 능력이 약화된 것도 장기불황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특히 소니의 경우, 미국식의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기업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비판한다.

결론적으로 “일본경제의 재생을 위한 관건은, 일본민중이 독립국에 걸맞는 주권자로서의 자각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정치경제학적 주장은 의미심장하다.

이 글은 일본경제의 부침을 미국과 관련시켜 해석하는 논리를 보여주는, 한국 독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참신한 내용이다. 이 논리를 연장하

면, 고도성장이 가능했던 것도 미국의 핵우산과 냉전체제가 있었기 때문이고, 향후 일본이 제로성장하에서 바람직한 경제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김용복의 「200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과 정권 변동: 신자유주의, 복지주의, 신보수주의」는 보수우경화 정책은 장기불황이 가져다준 필연적인 귀결인가, 장기침체에 대응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았던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여러 시도가 성공 혹은 실패하면서 아베 내각의 보수우경화로 귀결되었다고 지적한다. 즉 고이즈미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성공한 결과 격차가 확대되고 그에 불만을 느낀 무당파층이 민주당으로 지지를 전환했으며, 민주당 정권의 복지노선이 실패하여 아베 정권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정권교체는, 예전과 달리 압도적인 의석 수를 확보한 제1당의 등장이라는 현상을 동반했는데, 이는 1994년에 종래의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이라는 제도적 변화에 의해 가능했다. 또한 1990년대 이후에는 무당파층이 전 유권자의 50% 정도까지 증가했는데, 이들의 유동적 투표 행위가 이상과 같은 급격한 정치변동을 발생시켰다는 점도 강조한다.

당초 편집자가 장기불황과 정치의 관계에 주목한 이유는, 1930년대 초 대공황을 탈출하는 경제정책(다카하시의 '적극재정')이 결국은 군부의 폭주 및 대외침략으로 연결되었다는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그 점을 염두에 둘 때, 이 논문에서 편집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경제상황이 직접적으로 정치노선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즉 아베 정권의 독주는, 아베 정권의 정치·외교 노선까지를 지지하는 전통적인 자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현실의 경제상황에 불만을 품은 무당파층의 지지로 인해 가능한데, 무당파층은 2009년에는 동아시아 협조노선과 복지정책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기침체가 심리적 박탈감을 강화시켜 보수주의 정권에 경사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으나, 그것이 곧바로 우경화 노선으로의 필연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그러나 전반적으로 경제상황과 경제정책이 정권의 교체·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은 인정된다. 즉 경기침체는 필연적으로 보수화·우경화 정권의 등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리버럴 정권으로의 교체를 다시금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고이즈미의 정책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베 정권의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긴장관계 고조 정책이 일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다시금 이를 시정하려는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더욱 크다.

결론적으로 아베 정권은 장기침체라는 경제상황에 의해 지탱되고 있으나, 그것이 곧 우경화·보수화 정치노선에 대한 지지는 아니다. 현 경제상태에 대한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을 지지하는 것이고, 그 지지를 배경으로 아베 정권이 보수화·우경화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역은 아닌 셈이다.

오학수의 「일본의 비정규직 문제의 현상과 전망」은 비정규직의 실태를 상세한 데이터에 기반해 소개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일본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은 1991년 19.8%에서 2015년 37.5%로 상승했는데, 그 원인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계속 취업 증가, 25~34세 연령층의 비정규직화, 남성의 비정규직화가 있다.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용 불안정성과 임금 격차인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은 20대에서 70%, 40대에서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으로는 먼저 수요 측 요인으로 기업의 인건비 절약, 고용 조정 필요성, 정사원 확보 곤란 등이 있고, 공급 측 요인으로는 남녀 모두 자기 사정에 맞게 시간 조정 가능이라는 요인이 정사원으로 일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서라는 비중보다 훨씬 높다. 청년층에 초점을 맞춰 비정규직화의 원인을 보면, 신규 졸업생 정시 채용이라는 고용 관행, 학업 부진 및 무관심 학생의 취업 능력 결여, 고용의 미스매치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감한 소비세 인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고령화 서비스 분야 등에서 정규직 수요를 확대하고, 교육투자를 증가시켜 학력·교육력 부재 문제를 극복할 것을 제안



하고 있다.

편집자에게는, 비정규직화의 요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라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청년층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으로서도 기업의 정사원 억제라는 요인이 결정적이지 않은 점이 주목되었다. 이는 저성장, 제로성장이 일상화된 세대에서 나타나는 ‘사토리 세대’의 의식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성취의욕의 상실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주로 거론되는 이 세대의 의식과 행동 양식은, 어쩌면 뒤에서 소개하는 다케노부의 논문이 지적하는 고용시스템의 개혁에 적합할지도 모른다. 즉 이러한 세대에 맞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부연하자면, 그 개혁을 위한 전제로 근로 형태에 따른 차별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점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다케노부의 「젠더 관점에서 본 저성장사회: 저성장으로의 적응을 가로막는 일본의 젠더 차별」은, 고도성장기에 ‘젠더 분업의 성공’ 이미지가 저성장에 적합한 일본의 사회 형성에 어떠한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는지를 해명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리하여 일본에서 장기불황의 탈출을 위해서는 남녀 모두가 경제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나 그것이 불충분하여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의 증가, 소득의 하향평준화, 소비 부진,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현재의 상태를 가져온 이유는 고도성장기에 남녀분업의 상이 고착되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으로서,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네덜란드형으로의 고용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즉 비정규직(단시간 근무)에 대한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젠더 간 차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저성장을 기회로 활용하여 풍요로운 성숙사회로 향하기 위해 일본 사회가 그 원점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과제”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이 지적은 앞의 다케다의 논지와 관련 있다. 즉 성장에 의해 젠더 간 차별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젠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의해서만이 저성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편집자의 생각에도 젠더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제로성장하에서 바람직한 사회를 구상하는 방법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과 같은 주요 결론 이외에도 이 논문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 즉 1985년에는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 제정되어 모집·채용·배치·승진에서 남녀별 차별이 금지되었으나, 그와 함께 종래의 남성 정사원처럼 장기간 노동·전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성은 남성과 차이를 두는 것도 허용되었다. 따라서 남녀별에서 종합직과 일반직이라는 코스별로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1995년 일경련(日経連)의 ‘신시대의 일본적 경영’에서 제기된 고용 포트폴리오는 그동안 여성노동자에게 적용되던 방식을 남성에게도 확대 적용한 것이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김계자의 「흔들리는 열도, 그래도 문학」은 1990년 이후 일본 문학의 흐름을 장기불황이라는 관점을 의식하면서 정리하고 있다. 이 논문은 기존의 정통적인 문학 연구의 관점에 봤을 때, 아직 평가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동시대적 작품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선하고 과감한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저성장 시대의 일본문학이 어떤 식으로 스스로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 비슷한 위기에 직면한 한국문학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편집자가, 오해를 무릅쓰고 특집과 관련하여 이 논문을 이해하면 다음과 같다. 즉 최근 20년간 일본 문학의 수요와 공급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우선 치유에 대한 문학 수요가 증가했는데 대표적으로는 구르메 장르가 있다. 체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장르는 우경화, 이데올로기의 부재와 함께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사회와 추리소설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노숙자들에 의한 길거리문학은 문학에 대한 공급자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이상 여섯 편의 논문에도 이번 기획에서는 특집과 관련 있는 시평 한 편을 준비했다. 여인만의 「아베노믹스를 둘러싼 논점」이 그것인데, 개별 논문에서 약간씩 거론된 아베노믹스에 대한 논점을 정리한 것이다. 아베노믹스

는 ‘세 개의 화살’이라는 말로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경제정책적·사상적으로 어떠한 배경하에서 제시된 정책인지에 대한 소개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리플레이션과의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문제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아베노믹스는 엔저와 주가 상승에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투자 및 소비의 증가라는 실물경제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대체할 대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정책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부작용이 매우 커서 일본경제를 파국으로 치닫게 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일본 전체와 운명을 같이하는 방향으로 아베노믹스가 진전되고 있는 상태라는 점이 결론적으로 지적된다.

이상과 같은 여섯 편의 논문과 한 편의 시평을 통해, 모두에서 제기했던 문제의식에 입각한 특집 기획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한계도 적지 않다. 일본을 대표하는 산업인 전자산업의 경쟁력이 1990년대 이후 크게 저하했다는 사실을 일본 내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를 미디어 담론을 통해 분석해보고자 했으나 준비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 또한 앞서 ‘사토리 세대’에 대해 언급했듯이, 일반적으로 부정적·비관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새롭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단초를 찾아볼 수 있는 사례, 예를 들어 시민운동에 대한 논문의 부재도 크게 느껴진다. 하지만 독자들이 이 특집을 통해 일본경제의 현상을 진단하고 전망하는 데, 나아가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데 ‘경제성장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프로파간다를 의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연구논단의 논문을 소개하도록 한다. 이번 호에서는 묵직한 주제를 치밀하고 예리하게 분석해내는 세 편의 논문을 싣게 되었다. 세 논문 모두 시대와 대상은 다르지만, 『일본비평』이 추구하는 목적, 즉 일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 한일관계 및 한국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뛰어난 작품이다.

이경분의 「베를린의 일본 음악유학생 연구: 1920~1930년대를 중심으

로」는 아카이브의 일차 자료를 통해 베를린에 유학한 일본 음악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음악유학생들이 일본과 독일을 연결하는 제국의 회로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고찰한다. 그 과정에서는 나치정권의 등장 전후의 독일 음악계의 상황, 당시 베를린에 유학하고 있던 일본인 유학생들의 사상과 활동 등에 대한 분석을 결합하여 음악유학생의 위상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한다.

김효진의 「일본의 초기 근대 건축의 양상과 변모: 식민지 연구를 위한 전제로서의 식민모국 연구」는 메이지 시기 일본에서 서양의 건축 양식을 구현하고자 했던 시도를 긴자(銀座) 렌가가이(煉瓦街), 로쿠메이칸(鹿鳴館)의 사례를 통해 밝히면서, 이를 주도한 서양의 건축가가 실제로는 일본적·동양적인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당시 서양 어디에도 없는 양식이 되어버렸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이해가 식민시기에 한국에 건립된 ‘일본 건축물’의 의미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한다고 필자는 강조한다.

신기영의 「글로벌 시각에서 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관계의 양자적 틀을 넘어서」는 최근 20여년간 이 문제의 이슈화와 해결방법을 둘러싼 노력을 정리하면서 2015년 말 한일 간 ‘합의’ 형태로 ‘해결’이 시도된 ‘위안부’ 문제가 글로벌 여성인권이라는 시각에서 보았을 때 가지는 문제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